

<내면의 진정성에 대한 병무당국의 조사방법 제도화 과정 연구>에 대한 토론문

양여옥(인권재단사람 활동가)

대체역 제도는 양심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출범한지 만 3년이 다되어가는 지금 시점에 심사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은 어색하기만 하다. 애초에 ‘심사’라는 방식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발제문의 결론에서도 지적했듯 “양심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양심에 대한 심사가 반드시 불가능하거나 위험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현재 심사위원회는 징집을 목적으로 하는 병무청 산하 기관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사무국은 병무청에서 파견나온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임위원 2인(위원장과 사무국장)은 국방부에서 추천한다. 이런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사용하던 방식을 그대로 차용해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그럴만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여전히 ‘병역기피’라는 단어를 아무렇지않게 사용하고, ‘신청인이 문제없이 깨끗한지’ 확인하기위해 폭력게임을 질문하는 상황은 꾸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행중이다. 군대에 갈 수 없다는 개인의 양심을 기존 주류의 시각으로 판단하고 재단하는 심사과정을 확인하고 방어해왔는데, 조만간 3년 임기가 끝나고 심사위원 숫자가 29명에서 13명으로 줄어들며 국방부의 추천비중이 더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대체역 심사가 양심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헛되고 헛되다.

대체역 신청을 위해 넘어야할 첫 관문, 의무제출서류

대체역법이 만들어지며 법안이 누더기가 되는 과정에서 병역거부자가 급증할 것을 두려워한 국회의원들은 입영대상자들에게 대체역제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고지의무를 삭제했다. 현역복무의 2배인 3년간 교정시설 합숙복무라는 대체복무의 실체는 과거처럼 감옥을 견뎌낼 만큼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감히 선택하지 못하게 했고, 그 결과 대체역 신청자 숫자는 늘지않았다.(대체역신청자가 늘지않아 심사건수가 줄어들자 심사위 조직이 축소되었다) 대체역 편입신청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너무 많다는 것도 대체역 신청을 주저하게 만드는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변에 대체역을 신청해본 사람도 없고 관련 정보를 얻을 기회가 없거나, 교육의 기회가 적어 자신의 생각을 언어화하는 것이 어렵거나, 문서작성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이 많은 제출서류 목록 앞에서 좌절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서류미비로 인해 각하된 건이 존재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클 것이다.

양심을 심사한다는 명목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의 과도함은 대체역제도 시행초기부터 여러 위원들이 공유하고 있던 문제의식이었다. 시행규칙에 명시되어있지는 않더라도 신청인의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더많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신청인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글도 제출받아 첨부한다. 수혈을 거부하는 교리를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위해 ‘사전

의료지시 및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는지 사진을 찍어 첨부하고, 폭력적인 게임이나 영상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의 SNS계정을 열람하여 목록을 첨부하며, 게임아이드로 로그인해 최근접속기록을 확인하기도 한다. 이 과정이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진행된다고는 하지만, 심사를 위한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의 열람요청 및 추가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신청인은 아직 보지 못했다.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조사하다보니 굳이 심사에 필요하지않은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들여다보게 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한다. 그 사례 중 하나가 가족관계에 대한 부분이었다. 22년 2월 개정된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부모진술서가 의무제출서류였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중이라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진술서 미제출사유를 확인하는 서류까지 첨부했다. 대체역 신청과정에 부모진술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부모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이라 사실상 성인의 대체역 선택에 대해 부모의 허락을 받아오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과거에 공개적으로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수감생활을 했던 병역거부자들도 당시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지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부모진술서가 의무제출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진입장벽이 될 수밖에 없었다. 부모가 자식을 가장 잘 알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상가족의 환상은 여러 사례들로 무너지고 있었다. 여러 논의 끝에 대체역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개정안에 대한 대체역심사위의 의견을 의결했고, 이 의결안은 병무청, 국방부를 거치며 일부 수정되어 결과적으로는 의무제출서류 중 부모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초등학교생활기록부가 삭제되었다. 안타깝게도 제도시행 이후 지금까지 심사위 의견으로 제도가 개정된 사례는 이 건이 유일하다.

위험성이 높은 학생생활기록부의 쓸모

신청인 입장에서는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고 그 서류에 대한 확인과정까지 거쳐야하니 당연히 힘겨울테고, 심사위원 입장에서도 신청인 1인당 거의 1백페이지에 가까운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상당히 버거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로 본인진술서, 사실조사보고서, 문답서를 통해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한다면, 서류들 중 가장 활용도가 떨어지는건 학교생활기록부이다. 학교생활기록부는 교사의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적사항, 성적 등 상당히 많은 개인정보가 담겨있다. 봉사활동 실적이나 체험학습상황에도 대부분 학교에서 단체로 진행한 교육이나 교내환경정화와 같은 비슷한 내용이 채워져있기 때문에 실제 심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거의 없으면서도, 사생활 침해의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역거부 신념을 형성한 시기와 연관성이 가장 적은 초등학교 시기의 학교생활기록부는 위에서 언급한 시행규칙 개정과정에서 삭제되기도 했다.

조사관이 작성하는 사실조사보고서나 심사과정에서 등장하는 학생생활기록부 관련 내용은 결석이나 지각 여부와 그 사유, 투표표를 통해 임원선출이 되었거나 투표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한 수련회의 해병대캠프나 서바이벌게임, 태권도수업과 같은 활동에 참여했는지, 장래희망으로 군인이나 경찰, 프로게이머 같은 직업을 원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즉, 문제없이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했는지, 종교적 교리를 위반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찾아내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에 소년법 상 보호처분 이력도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 소년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심사자료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한 것과

는 또다른 차원으로, 청소년기 시절 반항심과 호기심, 흔들림과 방향은 양심의 일관성을 의심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생기부의 내용마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민주주의를 훈련하는 과정으로서 투표에 참여했다는 기록이나 봉사활동으로 헌혈을 통해 나눔을 실천했다는 것과 같은 내용은 당사자도 왜 그런 평가가 남아있는지 몰라 당황하고 과거의 행적을 다시 확인하느라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당시 담임교사는 미래에 도움이 되라는 좋은 의도로 비슷한 내용으로 일괄 작성했겠지만, 대체역을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하는 여호와의증인 신자에게는 양심을 의심할만한 행동으로 비춰진다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더 어이없는 것은 많은 여호와의증인 신자들이 포래집단의 영향(술.담배, 욕설, 이성교제, 폭력적인 게임, 선정적인 영상물 시청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퇴 후 검정고시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온갖 서류들로 신청인의 불성실함이나 양심의 오류를 찾아낸다고 해도 이를 해결할 별다른 방법은 없다. 대체역 심사에서 탈락하면 다시 입영영장이 나오고, 이는 군대에 가라는 뜻이기 때문에 병역거부 신념을 가진 사람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다. 다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는 과거와 같은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데, 수감생활을 감수할 만큼의 양심은 오히려 그 자체로 증명되는 것이며 심사위가 이러한 양심을 판단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줄 뿐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감옥행을 막고자 만들어진 대체역 제도가 아닌가.

부끄럽지 않은 대체역 제도를 위해 심사절차를 축소해야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감옥행을 선택하며 없던 길을 만들어온 오랜 세월을 넘어 기다려왔던 제도임에도, 대체역에 편입되기 위해 거쳐야하는 과정과 3년간 교정시설 합숙복무로만 제한되어 있는 대체복무의 실태는 너무 실망스럽다. 병역거부운동을 함께해왔고 지금은 심사위원으로서 대체역제도에 관여하고있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끄럽다. 군대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평화주의 신념을 발휘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선택하려하는, 평화운동의 동료가 될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 며칠전 국가인권위에서는 대체역 복무기간 단축과 복무영역 확대에 대한 권고¹⁾를 내렸고, 심사위에서도 최근 비슷한 제도개선안을 의결하여 병무청과 국방부에 보내기도 했으나 실제 제도개선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또 얼마나 내용이 수정되고 삭제될지 모르는 일이다.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병역거부자들이 받게된다. 제도개선이 된다고 해도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대체복무기간이 군복무기간과 비슷해지기까지는 매우 오랜시간이 걸릴 것이다. 대체역이 다른 종류의 병역과 동등하게 인정받는 때가 오기 전까지 대체역에 인원이 몰릴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대체역 편입심사의 절차는 지금보다 축소하고 간소화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라도 해야 대체역에 지워진 이중의 부담(심사와 복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지 않을까.

1)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9093&menuLevel=3&menuNo=91>